

# AI 활용 혁신신약 개발 ‘임상데이터 공유’ 관건

##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해외선 기밀유지, 데이터활용 논의  
인센티브 제공, 지재권 등 개방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물론 정보통신(IT) 기업, 산학연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한다.

7일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호텔에서 열린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김재영 책임연구원은 한국에서도 AI를 활용해 혁신신약을 만들기 위한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은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수한 데이터의 확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미셀 파텔 헬스 인포메티cs 글로벌 담당 최고책임자는 “한국 사회는 데이터를 통해 알고 있는 최대한의 가치를 유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규제당국이나 기업, 산학연이 모두 협력해 우수한 데이터와 정보를 나누고 이것이 혁신 신약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임연구원은 “AI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해외에서는 각각 제약사의 기밀은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기 시작했으나 국내는 아직 뒤처져 있다”고 지



7일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호텔에서 열린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2019’에서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적했다.

컨퍼런스에 모인 전문가들은 충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데이터 공유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몰레큘 프로토콜의 폴 콜하스 대표는 “현재 약물 개발 모델은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이 폐쇄적”이라며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지식재산권을 개방하고 공유하도록 해 추가적인 혁신과 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빅데이터 공유 기구 ‘멜로디(Innovative medical data project)’가 우수한 사례로 꼽혔다.

안드레아스 벤더 박사는 “멜로디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신약개발을 위해 환자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프로젝트”라며 “멜로디는 개발 단계에서 임상시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데이터 기반을 조직하고 임상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텔 책임자는 “한국 역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협약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연구자들도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신규 기술에 데이터를 적용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의약품분야 AI솔루션에 특화된 9곳의 개발사·대학·연구기관이 AI 기반 신약개발의 동향과 미래를 전망하고, 실제 적용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지자체 금고지기 선정 ‘지방은행 완승’

하반기 50곳 중 36곳 선정 완료  
지방은행이 운영하던 2곳 변경  
시중 운영 1곳 지방은행이 차지

올 하반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기’ 선정이 막을 내린다. 예상과 달리 금고지기가 바뀐 곳은 3곳으로, 지방은행과 농협은행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금고선정기준 개선조치와 함께 경기침체, 저금리 기조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시중은행이 무리한 경쟁을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새로운 금고지기를 선정하는 지자체 50곳 중 현재까지 36곳의 선정작업이 완료됐다. 부산동래구, 경남·경북도본청은 대부분 지방은행과 NH농협은행에게 돌아갔다. 올해 초 시중은행과의 과열 경쟁으로 금고지기 자리 빼앗길 수 있다는 지방은행의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현재 지방은행이 1·2금고를 운영해 오던 23곳 중에서는 13곳이 지정됐고, 나머지 10곳은 11월 중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지방은행이 운영해오던 금고 중 변경된 곳은 2곳이고, 1곳은 시중은

행이 운영하던 것을 지방은행이 가져 오게 됐다.

지난 2017년 전북 군산시 2금고를 내준 전북은행은 올해 탈환에 성공했지만 전남 광양시 2금고를 국민은행에 빼앗겼다.

광주은행은 전남 목포시 제1금고를 운영하게 됐다. 목포시 금고는 1961년부터 약 60년간 기업은행이 운영하던 곳이다. 광주은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목포시의 일반회계와 통합관리 기금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올해 말 발표하는 광주 동구(11월 19일 심의), 서구(11월 초), 북구(11월 중)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광주 동구, 서구, 북구 3개 기초자치단체는 광주은행이 1금고를 맡고 있으며, 서구와 북구는 내년부터 1·2금고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지자체 금고 유치전이 지난해와 달라진 배경에는 우선 정부의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 개정이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은행 간 협력사업비(출연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개선안을 보면 출연금 평가배점은 기존 4점에서 2점으

로 낮아졌고, 지자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했다. 수납처리능력은 배점을 낮추고 관내 지점, 무인점포, ATM기수에 따른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올렸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금고 선정 기준이 올해 조정됐고,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과열경쟁에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자체도 꾸준히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방은행을 외면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침체와 저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된 국면도 영향을 미쳤다.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면 지자체 예산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 공무원 예금 및 대출도 증가한다. 시중은행의 입장에선 안정적인 자금을 관리할 수 있어 금리를 높여 공격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저금리, 대출규제 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을 제외한 대다수의 은행은 경쟁에 뛰어 들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였다”며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도 많지만 저금리 속, 지자체에서 우대금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만 따지고 달려들기엔 무리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건강보험료 가구당 월평균 ‘10만4201원’

### 2018 건강보험통계 연보

직장인 11만원, 지역가입자 8만원  
“체계 개편… 저소득층 부담 줄어”

매달 건강보험료로 내는 금액이 소득계층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201원이었다.

연도별 가구당 월보험료는 2010년 7만988원, 2011년 7만8822원, 2012년 8만4040원, 2013년 8만7417원, 2014년 9만806원, 2015년 9만4040원, 2016년 9만8128원, 2017년 10만1178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2018년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를 가입 자격별로 보면 직장가입자(개인 본인 부담 보험료 기준, 사용자 부담금

제외)는 11만2635원, 지역가입자는 8만5546원이었다.

직장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1년 8만2802원, 2012년 8만9028원, 2013년 9만2565원, 2014년 9만7046원, 2015년 10만510원, 2016년 10만4507원, 2017년 10만7449원, 2018년 11만2635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2011년 7만2139원, 2012년 7만5209원, 2013년 7만7783원, 2014년 7만8629원, 2015년 8만876원, 2016년 8만4531원, 2017년 8만7458원 등으로 늘다가, 2018년에는 8만5546원으로 처음으로 줄었다.

건보공단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애초 대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세경 기자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성인 47% “타다서비스 운용 허용해야”

4326명 대상 설문조사  
허용 이유 38% ‘택시문화 개선’

야기’(26%) 등을, 반대로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은 △‘현재 택시문화 개선’(38%)과 △‘공유 모빌리티 시장 확대’(35%) 등을 꼽았다.

타다 등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절감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20%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경험에 있었고, 직장인 그룹(22%)의 이용 경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직장인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간 단축’(37%)이 꼽았다. 이어 △‘서비스 불만 최소화’(33%) △‘편리한 결제방법’(29%) 등이었다. 승차거부, 배차지연 등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해둬 결제가 편리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용수 기자 hys@

## 단위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확대

» 1면 ‘자사고·외고 등 폐지…’서 계속

아울러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운영해 학생 맞춤형 진로, 학업설계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개별적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도 추진된다.

특히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 과목(수학·영어)을 실용수학·실용영어 또는 기초 수학·기초영어(신설)로 대체 이수가 허용되는 등 학생의 학

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가 지원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은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과 2022년 각각 부분개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내년 중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